

도내 제22대 총선 격전지를 가다 - 전주를

민주 VS 국힘 VS 진보... 승자는 누구?

4·10 국회의원 선거를 29일 앞두고 전주를 지역구는 다지구도로 대진표가 확정됐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강세인 전북 중에서도 과거 여당 후보가 당선됐고 지난 보궐선거에서는 진보당이 차지하는 이번도 연출되면서 사실상 전북정치 1번지인 전주를이 전북 내 최대 격전지로 떠올랐다.

정치권에 따르면 출마 후보자 면면을 살펴보면 각양각색의 색깔이 확실한 만큼 그 어떤 누구의 승리도 장담할 수 없는 지역이다. 무엇보다 전주를 선거구는 조직싸움이 아닌 바닥민심이 당선을 결정지를 것으로 보여 전주를 유권자들의 이번 선택의 향방이 주목된다.

▲민주, 출마 10일만의 기적... 이성운 전 서울고검장

민주당 전주를 선거구 경선 결과는 정치신인 이성운(62) 전 서울고검장이 압도적 표로 공천장을 거머쥐었다. 지난달 23일 이 전 고검장이 민주당에 영입됐고 4일 뒤 출마를 선언했다. 경선은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진행됐다. 정치입문 10일만의 결과였다.

과반이 넘는 득표를 받아 4년간 텃밭을 일구며 선거조직을 넓혀왔던 후보들을 모두 좌절시켰다.

이 전 고검장의 공천은 후보자 개인의 단순 지역 텃밭가꾸기가 아닌 유권자에 후보의 존재를 각인시킬 수 있는 '존재감'과 유권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시대의 흐름'을 읽는 능력을 갖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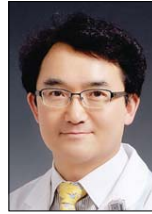
이성운(민주)



정운천(국힘)



강성희(진보)



전기엽(자유민주)



오삼례(자유통일)



김광중(무소속)

민주 이성운 · 국힘 정운천 · 진보 강성희 '3강'

군소정당도 출사표... 바닥민심 당선 향방 가를 듯

한다는 분석이다.

이 전 고검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로 검찰 내 대표적 '친문' (친문재인) 인사로 꼽힌다. 지난 정부에서 법무부 검찰국장·서울중앙지검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쳐 서울고검장으로 영전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한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밀려났다.

그는 "윤석열 사안은 하나회에 비견된다"는 발언을 하는 등 윤석열 대통령에 맞서 싸우는 투사의 이미지가 각인됐다.

▲국민의힘 정운천, 4년만에 전북 텃밭 한가운데 여당 기발 쫓나?

지난 20대 총선에서 전주를 선거구에 여당후보로 나선 정운천(70) 의원은 이미 이곳에서 한 번 공백지를 달았다. 보수진영의 불모지로 불리는 '전북'에서 3수 끝에 거머쥔 승리였다.

이후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여파로 정의당은 재선을 포기하고 비례대표로 선출됐다가 4년만에 지역구 탈환을 노린다.

반 여당 정서가 뿌리 깊게 박혀있는 전북이지만 정 의원은 이념적 성향보다 지역주의 타파라는 이미지가 더 크다. 무엇보다 전북을 위해 '쌍발통 정치'를 주장하는 대표적 주자로 인식되고 있다.

2016년 3차 구도로 벌어진 총선에서 거머쥔 승리경험이 있던 만큼 지난 20대 총선과 비슷한 구도로 펼쳐져 정 의원의 전주를 재입성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기도 하다.

정 의원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재선으로 쌓은 행정적·정치적 경륜을 앞세워 전주를 유권자들의 표심을 공략한다. 무엇보다 이번 선거에서 전북지역에 여당 기발을 쫓기 원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장의 직접적인 지원사격도 이뤄질 가능성도 높다.

▲진보당, 1년 전 기적을 다시 한번... 강성희 의원

강성희(51) 의원은 이상직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이 선고되면서 치러진 전주를 재선거 결과 승리를 거머쥐면서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조직면에서 약할 것이 라고 분석된 전주에 당선 기발을 끌어오면서 21대 국회에 진보당의 첫 입성이라는 기적을 연출했다.

당시 강 의원은 진보당 중앙당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전주를 바닥민심을 끌어모아 당선됐다. 이번 선거에서도 중앙당의 전폭적인 지원 속 전주를 재선에 성공하겠다는 포부다.

1년만의 선거지만 강 의원의 색깔은 더욱 진해졌다. 전북특별자치도 행사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정기조를 바꿀 생각이 없냐"는 질문을 했다가 경호원들에 끌려 나간 이른바 '입찰사건'을 계기로 윤 정부 심판론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그는 최근 "민생과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윤석열 정권의 출범은 사실 상 쿠데타였다"는 발언을 통해 반윤(반윤석열)의 이미지를 명확하게 했다.

▲군소정당·무소속도 출사표... 전기엽·오삼례·김광중

전주에는 보수성향으로 분류되는 자유민주당과 자유통일당도 후보를 냈다.

자유민주당 소속 전기엽(68) 전주 출신의 전임내과 병원장이 이번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전 병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문제점과 부작용의 실상을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기 위해 출마했다"며 "그간 백신의 문제점을 알리는 데 주력했으나 정부가 귀담아듣지 않아 정치의 힘을 빌리고자 한다"고 출마 이유를 설명했다.

자유통일당의 오삼례(60·여) 목사는 따로 기자회견 등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지만 전주를 선거구에 예비 후보로 등록한 상태다.

무소속 김광중(61) 예비후보는 지난 전주를 재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했지만 이번 선거에 또 다시 도전장을 냈다. 김 예비후보는 "9번째 선거 도전이고 이번 선거도 풀칠할 가능성도 높지만 1등만 알아주는 세상에서 풀칠들에게도 희망이 있음을 보여드리고 싶어 나오게 됐다"며 "부동산, 기계부채, 지방소멸, 고령화, 저출산 등 5대 문제 해결 솔루션을 가진 저 김광중을 선택해 달라"고 호소했다. /뉴시스

민주 안호영 의원, 21대 국회의원 공약 이행 전북 1위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은 21대 국회의원 공약 완료 이행평가에서 전북의원 중 1위로 '국회의원 공약대상'에 선정됐다.

34년 전통의 의정평가 시민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은 지난 11일 "스근 모니터 위원, 분야별 전문가를 비롯 국내외의 85개 대학교 대학생(2,349명)과 함께 지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공보에 게재된 선거공약을 평가점수별로 엄정하게 분석, 평가해 상위 25%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법률소비자연맹은 "21대 국회의원 1인당 평균 공약수는 66개이지만, 안호영 의원은 131건으로 공약수가 두 배 이상 많았고, 완료 공약은 55%, 완료 단계 공약이 72건이 되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중 5위, 전북의원 중 1위에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안호영 의원은 21대 총선 공약인 '완주 수송특화 산단 조성 추진'을 이행하였고, △인구감소지역 특례 지원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망 확충 △산림·건강·관광도시 도약 △산진무장 맞춤형 도시재생 추진 △혁신도시 새 공공기관, 공공관 등 추가 이전 등 주요 사업을 완료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안호영 의원은 "국회의원 공약은 지역주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인 만큼 반드시 지키려고 지난 4년 동안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해 왔다"며 "21대 국회는 코로나 발생으로 관광 분야 공약 등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해 아쉽지만, 완료 되지 않은 공약은 22대 국회에서 계속 추진해 가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진안=우태만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 왼쪽), 이해찬-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나라를 바로 세울 기회"... 민주, 선대위 출범

상임공동선대위장에 이재명·이해찬·김부겸

더불어민주당이 12일 4·10 총선을 앞두고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민주당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를 열었다.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표, 이해찬 전 대표,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선임됐다.

이 대표는 "이번 4·10 총선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결이 아닌 국민과 국민의힘의 대결"이라며 "나라를 망치고도 반성 없는 윤석열 정권의 심판을 위해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 국민이 승리하는 길에 유용한 도구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어 29일 남은 이번 총선을 '윤 정권 심판의 날'로 규정하며 "대한민국이 이대로 무너질 거냐 여부를 결정짓는 역사적 분수령"이라며 "위대한 주

권자의 현명한 선택으로 국가적 몰락 막고 나라를 다시 바로 세울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고 역설했다.

김 전 총리는 "우리 모두가 한 팀이 돼 절박한 이번 선거에서 국민들의 마음과 에너지를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책임하고 무능한 윤 정부의 독주를 막기 위해선 우리 후보 모두가 절박해야 될 것 같다"며 "심판론을 이야기하는 국민들이 알아서 해주지 않겠나라는 안일한 마음과 자세가 있었다면 안 된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현실 정치 떠났지만 절실한 심정으로 선대위에 합류하게 됐다"며 "이번 총선은 지금껏 치렀던 선거 중 가장 중요한 선거다. 이번엔 꼭 심판을 잘해서 국민들이 받는 고통을 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뉴시스

민주, 총선 '10대 공약 확정'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기본주택 100만호 공급 등을 담은 '총선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 회복, 미래 희망, 민주 수호, 평화 복원의 4가지 비전을 중심으로 한 '총선 10대 공약'을 확정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10대 공약에는 △기분주먹공급 등 민생 안정 △저출생 극복 △기후위기 대처와 재생에너지 전환 △혁신성장과 균형발전 △국민 건강과 행복 △국민 안전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쟁력 강화 △한반도 평화 △민주주의 회복 △정치개혁 등이 제시됐다.

민주당은 10대 공약 외에 어르신 전용 안심 주택 10만호 공급 등 노인 정책도 확정했다. /뉴시스

"도민과 함께 중앙정치 중심 될 것"

민주 김윤덕 의원, 3선 도전... "전북 자존심 살려내겠다"

더불어민주당 조직사무부총장직을 담당하고 있는 김윤덕 의원(전주갑, 재선)이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3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그러면서 "3선 국회의원이 된다면 이재명과 함께, 전북도민과 함께 중앙 정치의 중심이 되어 전북의 자존심을 살려내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12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한민국의 균형발전과 국민이 주인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준엄한 사명감으로 22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를 선언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특히 "이번 22대 총선은 반헌법 세력, 친일 반민족 세력을 심판하는 역사적인 선거"로 규정하면서 "윤석열 정권이 선거 때 외쳐왔던 공정과 상식은 흔적도 찾을 수 없고 오로지 검찰 권력을 이용해 국정 파트너인 야당의 이재명 대표에 대해 300여 회가 넘는 압수수색을 벌이고, 말도 안 되는 죄를 뒤집어 씌워 온갖 수모와 고통을 겪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북지역과 관련 "대통령은 자신이 공약했던 신재생에너지, 이차전지, 농생명 수도, 문화 관광의 중심지 등은



전혀 지킬 생각이 없으며, 전북을 홀대하고 잼버리를 명분 삼아 새만금 예산을 삭감하고 새만금 신평형을 비롯한 여러 전북의 숙원 사업을 재검토라는 명분으로 줄줄이 취소시키려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국회 다수당으로서 더 치열하게 싸워야 했던 민주당이 많이 부족해 죄송하다"고 말하고 "그러나 검찰을 앞세워 국가폭력을 휘두르고 오만과 독선으로 국정을 이끌고 있는 윤석열과 국민의힘 세력은 마땅히 먼저 심판받아야 하며, 전북도민이 중심이 돼 민주당을 앞세우고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을 심판해 줄 것"을 호소했다. /특별취재반

내수면어업 육성·지원 조례안, 도의회 상임위 통과

이병철 의원 대표발의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이병철 의원(전주7)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내수면어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도내 내수면어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여 내수면어업 관련 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할 뿐 아니라, 수산자원의 보호와 내수면어업인의 경쟁력강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안은 수산자원의 보호를 비롯한 내수면어업의 생산성 향상 관련 산업



육성, 전문인력 양성 등을 포함하는 내수면어업 진흥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해 앞으로 내수면어업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내수면어업 사업지원, 내수면어업 발전 협의회 설치 및 운영, 포상 등 내수면어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김재훈 기자



"기재부 예산편성시 재량권 남용 우려"

국주영은 자치도의회 의장 시도의회회장협의회서 국가재정법 개정 촉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국주영은 의장은 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년 대한민국시도의회회장협의회 제2차 임의회'에서 예산 편성 과정의 투명성 및 공공성 증진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을 촉구했다.

그간 기획재정부가 중앙부처 국회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강력한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 단계에서 투명성과 공공성을 보장할 제도적 장치의 부재로 인해 재량권 남용 우려가 있었다.

국주영은 의장은 "지난해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큰 폭 삭감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기획재정부는 삭감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나 논리를 제시하지 않았고,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와 의회,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부당한 예산 삭감에 대응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고 지적했다.

국주영은 의장은 이어 "정부는 앞으로 이러한 부당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 과정을 지방자치단체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중앙관서 제출 예산 수정 시 기획재정부와 관계 부처의 의무적 협의를 규정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재훈 기자